

주간 통일정세

2017-2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6.17	北 박봉주 총리, 강원도 축산기지 방문(연합뉴스) 北 신문, 6·10 항쟁 맞아 “민주의 새 제도 여는 투쟁” 선동(연합뉴스)
	6.18	北, 노병·상이군인 우대 강조...“젊은세대 각성 목적”(연합뉴스)
	6.19	北 신문, ‘김정일 黨사업 53돌’ 맞아 “초급당·당세포 강화”(연합뉴스) “北, 반관반민 대화서 ‘위협시 핵무기 사용’ 의지 밝혀”(연합뉴스)
	6.20	北 김정은, 생산공정 자동화 치과용품공장 시찰(연합뉴스)
	6.21	日 언론 “北 당국자, 비공식회의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언급”(연합뉴스)
	6.22	北 외무성, ‘11국 3연구소’ 공개...공식 홈페이지 개설(연합뉴스)
	군사	6.17
6.19		38노스 “북한, 비밀리에 핵·생화학무기 개발...전국에 위장시설”(연합뉴스)
6.20		美 전략폭격기 B-1B 2대 또 한반도 출격...F-15K와 훈련(연합뉴스) 美 전략폭격기, 월 1회이상 출격할 듯...“계획된 훈련 축소안해”(연합뉴스)
6.21		‘무인기에 뚫린 영공...軍, 격추용 신형 대공포 개발(연합뉴스)
6.22		美 당국자 “北핵실험장에 더 많은 사람과 차량”(연합뉴스)
6.23		美 관리 “北 로켓엔진 발사 시험...ICBM용 가장 작은 엔진 가능성”(연합뉴스)
경제	6.17	獨, ‘제재위반’ 北대사관 호텔 임대 “긴급히 해결노력”(연합뉴스) 北 지방서도 택시영업 ‘성행’...“돈주, 운수업 장악”(연합뉴스)
사회 문화	6.19	중국어 배웠다...北평양에 공유자전거 ‘러멍’ 등장(연합뉴스)
외교 국방	6.17	北, 시리아군 공습 美 비난...“핵무력 강화 옳았다”(연합뉴스) 日당국자, 몽골서 北외교관 만나 ‘핵·미사일 불가’ 재확인(연합뉴스)
	6.18	北,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참석 사실 보도(연합뉴스) 北단체 “미국, 노골적으로 사드배치 강박” 비난(연합뉴스) 北, 뉴욕공항서 北대표단 외교행낭 “미국이 강탈” 주장(연합뉴스) 北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용,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연합뉴스)
	6.19	美, 北 ‘외교행낭 강탈’ 주장에 “외교특권 대상 아니다”(연합뉴스) WSJ “北·美, 1년 넘게 비밀 외교채널 가동”(연합뉴스)

6.20	美 합참의장 “미국의 주된 북핵 대응수단은 외교·경제 압박”(연합뉴스)
6.21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만날 가능성 더 멀어져”(연합뉴스)
	北 신문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중동정세 격화” 비난(연합뉴스)
	日, 이번엔 미사일 대피 소개 TV광고…북한발 공포 부채질(연합뉴스)
	日 방위성, 北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 배치훈련 공개(연합뉴스)
6.22	美 하원 외교위원장, ‘초강력 대북제재법’ 상원 처리 촉구(연합뉴스)
	美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더 강화할 수 있다”(연합뉴스)
	北, 트럼프 비난 수위 높여… ‘정신병자’ 지칭(연합뉴스)
	北 “美이지스함, 北경제수역 200km이상 침범해 정탐행위” 주장(연합뉴스)
北 외무성, ‘對쿠바정책 수정’ 트럼프 비난(연합뉴스)	
6.23	美 국무부 ‘先군사훈련 중단’ 北주장 일축 “비핵화해야”(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6.20	생산공정 자동화 치과용품공장 시찰	황병서, 박봉주, 최태복, 오수용, 안정수, 서홍찬, 조용원, 마원춘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6. 20.

■ 北 김정은, 생산공정 자동화 치과용품공장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축한 치과용품 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며 그가 공장의 각종 공정 시설을 돌아보며 생산실태를 알아보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의료의 혜택을 실지(실제) 폐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6. 17.

■ 北 박봉주 총리, 강원도 축산기지 방문(연합뉴스)

- 박봉주 내각총리가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을 찾아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박 총리는 강원도 양묘장과 어구종합공장 건설현장도 방문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6. 22.

■ 北 외무성, '11국 3연구소' 공개·공식 홈페이지 개설(연합뉴스)

- 북한의 외무성이 공식 홈페이지(www.mfa.gov.kp)를 개설하고 내부 조직구성을 공개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홈페이지가 개설됐다”며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11개국으로 구성됐고 산하에 3개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외무성의 국은 담당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나뉘었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6. 18.

■ 北, 노병·상이군인 우대 강조…“젊은세대 각성 목적”(연합뉴스)

- 북한이 6·25 전쟁 참전 노병과 상이군인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간부들을 연일 소개하는 등 노병과 상이군인 우대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이런 일꾼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쟁 노병들을 잘 챙기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당 간부들의 미담을 자세 히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 간부들은 관내의 전쟁 노병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약을 공급 하고 명절이면 노병들의 집을 방문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병에게는 TV와 생활용품을 선물하고 노병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2017. 6. 19.

■ 北 신문, ‘김정일 黨사업 53돌’ 맞아 “초급당·당세포 강화”(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사업 개시 53돌을 맞아 초급당과 당세포(당의 최하위 말단 기층조직) 강화를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53년 전인 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거대한 사변”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당의 지도 사상,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고 수령의 영도적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반관반민 대화서 ‘위협시 핵무기 사용’ 의지 밝혀”(연합뉴스)

- 북한 인사들이 최근 미국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최근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북한 인사들과의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했던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힘.
-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 측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끝에 핵무기를 갖게 된 만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에 발언함.

2017. 6. 21.

■ **日언론 “北 당국자, 비공식회의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언급”(연합뉴스)**

- 북한 당국자가 이달 초 스웨덴에서 열렸던 안보 전문가들의 비공식회의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전함.
-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임.
- 회의에 참석한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도쿄국제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자위 목적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6. 17.

■ **“北, 민간용으로 연 원산 갈마공항에 전투기 배치”(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에 최근 전투기 20여 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프랑스 국가우주연구센터(CNES)와 에어버스사 인공위성이 지난달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이런 모습이 포착돼 구글의 위성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공개됨.
- 갈마공항 터미널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거리에 미그-19, 미그-21로 보이는 전투기 20대가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터미널 뒤쪽 8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3대가 포착됨.

2017. 6. 19.

■ 38노스 “북한, 비밀리에 핵·생화학무기 개발…전국에 위장시설”(연합뉴스)

- 북한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핵·생화학 무기(NBC)를 개발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주장함.
- 38노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한 NBC(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인프라 개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0여 년간 국가 철학인 주체사상에 따라 꾸준히 핵·생화학 무기 확대를 추진했다고 주장함.
- 38노스는 파악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나 곧 보유할 예정이라고 분석했으며, 또 공격용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들 무기 재고를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2017. 6. 21.

■ 美 당국자 “北핵실험장에 더 많은 사람과 차량”(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장에 사람과 차량의 증가가 포착됐다고 미 폭스뉴스가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이 당국자는 미 정찰위성으로 탐지된 북한의 핵실험장 사진을 설명하면서 “더 많은 사람과 차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함.
- 그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북한이 핵실험장으로 알려진 장소에 자원을 지속해서 집결시켜왔다고 설명함.

2017. 6. 23.

■ 美 관리 “北 로켓엔진 발사 시험…ICBM용 가장 작은 엔진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또다시 로켓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은 북한이 전날 시험한 로켓엔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가장 작은 엔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작은 엔진은 1~3단계 중 3단계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북한이 시험한 로켓엔진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용 엔진이거나 위성 발사용 엔진일 수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그동안 위성 발사용 엔진이 똑같이 ICBM용 엔진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고 지적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6. 20.

■美 전략폭격기 B-1B 2대 또 한반도 출격...F-15K와 훈련(연합뉴스)

-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에 출동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B-1B 2대가 오늘 한반도에 출격해 공군 F-15K와 연합훈련을 한다”면서 “전략폭격기 출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이번 B-1B 출동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美 전략폭격기, 월 1회이상 출격할 듯...“계획된 훈련 축소안해”(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를 월 1회 이상 한반도로 출격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 일각에서 ‘비핵화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무기 출동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 개의치 않고 계획된 연합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20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월 1회 이상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2017. 6. 21.

■‘무인기에 뚫린 영공’...軍, 격추용 신형 대공포 개발(연합뉴스)

- 군 당국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섬.
- 3년 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했을 때도 까맣게 몰랐던 군은 당시에 대응책을 내놨으나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21일 “우리 군은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보강전력 확보를 가속화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7. 6. 17.

- 北 지방서도 택시영업 '성행'...“돈주, 운수업 장악”(연합뉴스)
 - 북한의 지방 도시들에서도 최근 ‘돈주’(신흥부유층)들이 운수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영업이 성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17일 “최근 개인들이 승용차 여러 대를 사들여 군부대나 국가 명의를 ‘택시사업소’로 등록하고 운전기사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다”며 “돈주가 택시업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돈주들이 택시회사 운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안정적으로 하루에 수십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어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택시업계를 장악한 돈주들은 주민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보안성 등 공안기관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단속 등을 피한 뒤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6. 17.

- 獨, ‘제재위반’ 北대사관 호스텔 임대 “긴급히 해결노력”(연합뉴스)
 - 독일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호스텔 임대 행위에 대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미국 주재 독일 대사관은 전날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대사관의 상업적 건물 임대를 독일 정부가 금지할 것은 명백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힘.
 - 대사관 측은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일관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독일 정부의 각 부처들이 긴급히 추구하는 목표”라고도 강조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6. 19.

- 중국서 배웠나…北평양에 공유자전거 ‘려명’ 등장(연합뉴스)
 - 중국 전역에 공유 자전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함.
 - 19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최근 평양 도심에 공유 자전거 보관소가 등장했으며 조만간 공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임.
 - 이 공유 자전거의 이름은 ‘려명(RYOMYONG)’으로 녹색과 노란색으로 디자인돼 있으며, 이 자전거는 거치대에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자전거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중국 언론들은 이 비밀 번호가 ‘ABC’라면서 아직 매우 단순한 형태라고 보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6. 17.

- 北, 시리아군 공습 美 비난…“핵무력 강화 옳았다”(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시리아군을 공습한 미국을 ‘국제테러의 원흉’이라고 맹비난하며

- 핵 무력을 강화해온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우리의 선택은 천만번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시리아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언급하며 “이것은 반미적인 시리아 정부의 전복을 겨냥한 포악무도한 국가테러 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미국의 대 테러전에 대해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을 테러의 주범으로 몰아 지구 상에서 제거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함.

2017. 6. 18.

■ **北단체 “미국, 노골적으로 사드배치 강박”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박하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가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발언, 토머스 새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잇단 방한과 사드 관련 언급 내용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다그어대며(재촉하며)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 담화는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뉴욕공항서 北대표단 외교행낭 “미국이 강탈” 주장(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뉴욕에서 개최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회의에 참가한 뒤 귀국하려던 북한 대표단의 외교행낭을 미국 측이 강탈했다고 18일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16일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우리 대표단이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 미국의 불법 무도한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외교신서물(diplomatic package)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변인은 “비행장에서 미국 내 안전성 소속이라는 인물들과 경찰들을 포함한 20여명이 외교신서장(diplomatic courier certificate)을 지참한 우리 외교관들에게 외교신서물을 빼앗으려고 강패처럼 난폭하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함.

2017. 6. 19.

■ **美, 北 ‘외교행낭 강탈’ 주장에 “외교특권 대상 아니다”(연합뉴스)**

- 미국 국토안보부는 18일(현지시간) 뉴욕 공항에서 외교행낭을 강탈당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측이 주장하는 대표단과 패키지(짐꾸러미)는 “외교적 불가침특권(면책특권)이 없다”고 반박함.
- 국토안보부의 데이비드 라관 대변인은 이날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공항에서 북측 관계자 3명으로부터 “다양한 미디어 아이템(media item)과 패키지를 압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라관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에 따르면 북측 관계자들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공인된 멤버(외교관)가 아니고, 외교적 불가침특권이 없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키지도 검색으로부터 외교적 특권이 없다”고 지적함.

■ **WSJ “北·美, 1년 넘게 비밀 외교채널 가동”(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1년 이상 비밀 외교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신문은 미국 외교관들이 평양과 유럽 몇몇 도시에서 최설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을 만났다고 보도함.
- 양국은 주로 오토 워비어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관해서도 다룸.

2017. 6. 20.

■ **美 합참의장 “미국의 주된 북핵 대응수단은 외교·경제 압박”(연합뉴스)**

-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주된 대응 수단이 외교와 경제적 압박이라고 밝힘.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국방부는 대북 군사 태세에 관해 국무부 측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경제·외교 압박정책 기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2017. 6. 21.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만날 가능성 더 멀어져”(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고 밝힘.
- 이 발언은 워비어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됐으나 엿새 만에 숨을 거두면서 최고조로 치달은 미국 내 대북 강경 여론을 반영하는 것임.
- 특히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보다는 현재의 ‘최고의 압박’ 작전을 한층 가속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분석됨.

■ 北 신문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중동정세 격화” 비난(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 의회의 최근 신규 제재 추진 움직임을 미국의 ‘중동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며 비난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중동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미국은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노력을 한사코 위협으로 몰아붙이려고 모지름(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이란이 지역 강국으로 되는 경우 미국의 중동 지배전략은 완전히 파산”이라며 “미국은 이것을 막아보려고 이란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2017. 6. 22.

■ 美 하원 외교위원장, ‘초강력 대북제재법’ 상원 처리 촉구(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미 대학생 오토 워비어(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의 조속한 상원 처리를 촉구함.
-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됨.
-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기존의 대북제재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임.

■ **美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더 강화할 수 있다”(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언론들도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음.
-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사건과 21일(현지시간) 개최된 미중 외교안보대화, 오는 29~30일 워싱턴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배가 주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하원 외교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북제재에 대한 ‘미신 대(對) 팩트(Myths vs. Fact):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미신)’를 지적하는 한편 제재를 더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北, 트럼프 비난 수위 높아… ‘정신병자’ 지칭(연합뉴스)**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등 최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침략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는(짓부수는) 무적의 힘’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며 “최근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놓고 보아도 그것은 결코 무근거한 억측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역대 미국 정부가 통치위기가 심화할 때마다 침략전쟁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정신병자인 트럼프에게 추종하여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대참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함.

■ **北 “美이지스함, 北경제수역 200km이상 침범해 정탐행위”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마스틴’이 지난 20일 북측 경제수역을 200km 이상 침범해 정탐을 했다고 22일 주장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제는 20일 일본 요코스카 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지스구축함 마스틴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들여 우리측 경제수역을 200km 이상이나 침범하면서 정탐행위에 돌아치게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두 대가 같은 날 한반도에 출동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제의 핵 타격 수단들이 남조선에 쏟아져 들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을 연이어 벌여놓고 있는 시기에 성조기까지 빼앗기(버젓이) 내건 해적선을 우리 경제수역 깊이까지 침범시켜 노골적인 정탐행위를 감행한 것은 결코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北 외무성, ‘對쿠바정책 수정’ 트럼프 비난(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對)쿠바 정책을 뒤집은 것을 담화를 통해 비난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쿠바 정책은 “쿠바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여 이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체도를 허물어 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은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들을 전복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으며 국제적 합의와 공약도 거리낌 없이 뒤집곤 했다”고 비판함.

2017. 6. 23.

■ **美 국무부 ‘先군사훈련 중단’ 北주장 일축 “비핵화해야”(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인도 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을 일축함.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미국이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 비핵화”라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렉스 틸러슨 장관의 기존 발언을 재차 강조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7. 6. 17.

■ 日당국자, 몽골서 北외교관 만나 '핵·미사일 불가' 재확인(연합뉴스)

- 일본 정부 당국자가 최근 몽골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와 만나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17일 보도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지난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리용필 부소장과 만나 짧은 시간 의견을 교환함.
- 다키자키 심의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일본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가 전했으며, 다키자키 심의관은 또 북한이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원을 조속히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함.

2017. 6. 21.

■ 日, 이번엔 미사일 대피 소개 TV광고...북한발 공포 부채질(연합뉴스)

-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대피훈련에 나서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 대피방법을 알리는 광고방송(CM)을 처음으로 방영하기로 함.
-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피방법을 소개하는 30초 분량의 CM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도쿄(東京)에 있는 5개 민영방송을 통해 방영할 예정임.
- 이 방송은 미사일이 일본에 낙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의 '전국 순간경보시스템'에서 긴급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을 설명하게 됨.

■ 日 방위성, 北미사일 대비 요격미사일 배치훈련 공개(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위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배치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함.
- 훈련은 도쿄 네리마(練馬)구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이뤄졌는데, 자위대의 PAC-3 배치 훈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기지에 있는

항공자위대 부대가 레이더 장비 등을 실은 차량을 아사카주둔지에 들여오는 것으로 훈련이 시작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6. 18.

■ 北,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참석 사실 보도(연합뉴스)

- 북한은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제4차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에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18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몽골대외관계성과 몽골전략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5일과 16일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제4차 울란바따르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대표단과 러시아, 중국, 몽골,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정책연구기관 대표단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다고 설명함.

■ 北 “우주의 평화적 개발·이용,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연합뉴스)

-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부로서 그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나라의 크기, 정견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함.
- 북한 대표단은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 우주 이용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최근 연간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위성 발사 등 우주과학연구사업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19		“트럼프, 사드 한국배치 둘러싼 논란에 격노했다”(연합뉴스)
	6.21	文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나 번복 아니다”(연합뉴스)	
		강경화, 美대사대리·주한미군사령관 접견…“동맹강화 최선”(연합뉴스)	
	6.22		틸러슨 美국무 “사드 관련 한국내 민주적 절차 존중”(연합뉴스)
	6.23		美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실험, 등가성 없어”(연합뉴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16	韓中 경제수장, 11개월 만에 양자면담 …사드 해결 ‘물꼬’(연합뉴스)	
	6.20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 “G20 계기 한중정상회담 준비 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19	北인권엔 소신 강경화…위안부문제엔 “한일관계 전반 관리”(연합뉴스)	

	6.20		日외상, 강경화장관과 신뢰구축 원하나 “위안부합의는 이행해야”(연합뉴스)
			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연합뉴스)
	6.21	한일 외교장관 통화 “북핵폐기 긴밀협력” …위안부문제는 평행선(연합뉴스)	
		정부 “‘독도 일본땅’ 日교과서지침 강력 항의, 즉각철회 촉구”(연합뉴스)	
			日관방, 文대통령 ‘위안부 日법적책임·사과’ 언급에 “이미해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6.17		러시아, 한반도 상황 대비해 극동군에 최신에 방공미사일 배치(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6.18		中매체 “사드보복은 국민감정 문제…무역보복과 달라”(연합뉴스)
미중 관계	6.20	美 “中, 대북제재 더 해야…모래 외교안보대화서 직접 요구”(연합뉴스)	
	6.21	트럼프 “시진핑 北문제 도움 고맙지만 안통했다” 독자해법 경고?(연합뉴스)	

			中, 트럼프 '中,대북제재 효과없다' 발언에 "건설적 역할했다"(연합뉴스)
		美·中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합의"(연합뉴스)	
	6.22		中외교부 "미중 안보대화서 美에 韓사드배치 철회 요구"(연합뉴스)
		트럼프 "시진핑 정말 좋아해...중국과의 관계 훌륭"(연합뉴스)	
	6.23	美 "트럼프, 中역할 안통하면 美보호차 뭐든지하겠단것 밝혀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17		日호위함, 남중국해서 美항모와 공동훈련...中 견제(연합뉴스)
	6.18		日아베 "이지스함 충돌 美희생자 애도"...트럼프에 메시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19		러 "시리아 작전 美주도 국제동맹군 전투기 공격 표적될 것"(연합뉴스)
	6.21		러 외무차관, 美 정무차관과의 회담 일방 취소...제재 확대 반발(연합뉴스)
			"러시아 국방장관 전용기에 나토군 전투기 위협 비행"(연합뉴스)
	6.23	러시아 외무 "美 추가 제재, 양국 관계 심각 위협"(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20		日·베트남 '남중국해 연대' 강화... '中 견제' 해경 합동훈련(연합뉴스)
	6.22	中, 닌오위다오 日영토 표기지침에 "역사·현실 직시하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6.19		'美에 무력시위' ...중국·러시아 9월 동해서 해상연합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일러 관계	6.22		"러일 영유권 분쟁지역서 한국·러 업체, 항만공사" ...日 경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6. 19.

■ “트럼프, 사드 한국배치 둘러싼 논란에 격노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17일(현지시간) 밝혔.
-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지연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시간으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백악관의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2017. 6. 21.

■ 文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나 번복 아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함.
-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함.
-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함.

■ 강경화, 美대사대리·주한미군사령관 접견…“동맹강화 최선”(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함.

- 강 장관은 접견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의 토대가 되는 한미 동맹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임박한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강 장관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appalling) 일”로 평가한 뒤 “이 사안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100%의 연대감(solidarity)을 갖고 있다”고 말함.

2017. 6. 22.

■ **틸러슨 미국무 “사드 관련 한국내 민주적 절차 존중”(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국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힘.
- 틸러슨 장관은 이날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진행한 25분간의 통화에서 “사드와 관련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있다”는 강 장관의 말에 이같이 반응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함.
- 강 장관은 또 “사드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절차 취하는 것”이라고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설명함.

2017. 6. 23.

■ **美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실험, 등가성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맞교환이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한미가 오래 진행해온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등가성(equivalency)이 없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의 훈련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의 주의 깊은 참관하에 실시된다”고 강조함.

■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연합뉴스)**

-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함.

- 환영 결의안은 먼저 “미 상원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등의 입장을 밝힘.
- 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 필요성, 안보-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등을 촉구함.

나. 한·중 관계

2017. 6. 16.

■ 韓中 경제수장, 11개월 만에 양자면담…사드 해결 ‘물꼬’(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재무장관이 11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아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측 경제보복 시작 이후 첫 만남으로, 해결책 마련에 물꼬를 텃을지 관심이 집중됨.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함.
- 기재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견고한 경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함.

2017. 6. 20.

■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 재개…“G20 계기 한중정상회담 준비 협의”(연합뉴스)

-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북핵 문제 등이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현안이 된 가운데 20일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 측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함.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이 20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나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힘.
-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이날 양제츠 국무위원이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임성남 차관과 회견했다며 발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고, 이에 따르면 양제츠 국무위원은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를 중시해왔다”면서 “쌍방은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착실히 이행해 한중 수교의 초심을 잃지 말고 우호적 협력이란 큰 방향을 견지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7. 6. 19.

■ 北인권예 소신 강경화·위안부문제엔 “한일관계 전반 관리”(연합뉴스)

-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은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의 이슈로 (한일)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위안부 문제는 큰 현안이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겠지만, 양국관계의 다른 부분은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이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와는 별도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강 장관은 실제로 간담회에서 위안부합의와 관련, “인권 전문가로서의 공약도 있겠지만, 한일관계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함.

2017. 6. 20.

■ 日외상, 강경화장관과 신뢰구축 원하나 “위안부합의는 이행해야”(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원하지만,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기시다 외무상은 20일 각의(국무회의) 후 취재진에 강경화 장관 취임에 언급, “의사소통을 도모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고 싶다. 우선 전화회담부터 시작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그동안 해온 주장을 반복했음. 그는 “한일합의는 양국 정부가 합의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확실히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끈기있게 한국 신정권에 (이행을) 촉구해 가겠다”고 말함.

2017. 6. 21.

■ 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함.

-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임.
-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임.

■ 한일 외교장관 통화 “북핵폐기 긴밀협력”…위안부문제는 평행선(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1일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함.
- 외교부는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한일 및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대해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정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지침 강력 항의, 즉각철회 촉구”(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교과서 지침이 공표된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정부의 성명은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이어 성명은 “이번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日관방, 文대통령 ‘위안부 日법적책임·사과’ 언급에 “이미해결”(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과를 언급한 데 대해 “재작년 한일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한일 양국은 (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재작년 합의에서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말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추가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할 용의가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함.

라. 한·러 관계

2017. 6. 17.

■ 러시아, 한반도 상황 대비해 극동군에 최신예 방공미사일 배치(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 상황 악화에 대비해 극동 지역에 70km 이내 거리에서 최대 36개의 표적을 동시탐지, 격추할 수 있는 최신예 방공 미사일 체계를 구축함.
- 이즈베스티야, 스푸트니크 뉴스 등 러시아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극동군 관구 산하 방공부대에 'Buk-M3' 중고도 방공 미사일 체계를 처음으로 작전 배치함.
-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은 Buk-M3 체계 극동 배치는 한반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책의 하나라고 풀이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6. 18.

■ 中매체 “사드보복은 국민감정 문제…무역보복과 달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무역을 무기로 국제 문제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이야말로 가장 무역보복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반박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사평(社評)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관해 “미국은 가장 공개적으로 경제 요소를 외교 무기로 사용하는 국가”라며 그의 발언이 “매우 의아하다”고 비판함.
- 환구시보는 “미국이야말로 대외 경제 제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자 대표적인 국가”라며 “전 세계인은 ‘경제 제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미국을 떠올릴 것”이라고 지적함.

2017. 6. 20.

■ 美 “中, 대북제재 더 해야…모레 외교안보대화서 직접 요구”(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동맹인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라고 공식으로 요구함.
-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에게 이 같은 요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함.
-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고, 이번 주 중국과의 대화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함.

2017. 6. 21.

■ 트럼프 “시진핑 北문제 도움 고맙지만 안통했다” 독자해법 경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적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오토 웬비어(22)씨가 송환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 “북한 정권의 잔혹성 규탄” 등 연일 북한을 성토했던 가운데 나온 것임.

■ 中, 트럼프 ‘中,대북제재 효과없다’ 발언에 “건설적 역할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대북제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반박함.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또 줄곧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했다”고 강조함.
- 경 대변인은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의 공헌에 대해선 모두 아는 사실이고, 중국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긴장된 데 대해 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과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촉구해 왔다”고 강조함.

2017. 6. 22.

■ 美·中 “유엔 대북제재 기업과 사업 금지 합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21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연관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과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하기로 합의함.
- 미국 측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팡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틸러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함.
- 미국의 독자제재 움직임 경고에 중국이 대북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돈줄죄기가 더욱 강화될지 주목됨.

■ 中외교부 “미중 안보대화서 美에 韓사드배치 철회 요구”(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에 미중 외교안보대화 결과를 공지하면서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를 재천명하고 유관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함.
- 공지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트럼프 “시진핑 정말 좋아해..중국과의 관계 훌륭”(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나는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을 정말 좋아한다(I do like president Xi)”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州) 시더레피즈의 커쿠우드전문대에서 연설을 하고 “우리는 중국과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함.
- 그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난 중국의 지도자(시 주석)를 정말 좋아한다”고 거듭 강조함.

2017. 6. 23.

■ 美 “트럼프, 中역할 인통하면 美보호차 뭐든지하겠단것 밝혀와”(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또 앞으로도 대북압박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만약 그런 게 통하지 않으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함.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안 통했다고 비판했는데 향후 조치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함.
- 샌더스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 대해선 아주 극도로 분명하게 입장을 취했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7. 6. 17.

■ 日호위함, 남중국해서 美항모와 공동훈련...中 견제(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공동훈련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이즈모’와 ‘사자나미’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 미사일 구축함 등과 지난 13일부터 3일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힘.
- 해상자위대와 미 항모의 남중국해 공동훈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017. 6. 18.

■ 日아베 “이지스함 충돌 美희생자 애도”...트럼프에 메시지(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8일 미 해군 이지스함이 일본 앞바다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승조원들이 희생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냄.
- 아베 총리는 메시지에서 “이번 일로 큰 슬픔에 휩싸여 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빈다고 밝힘.
- 그는 “공고한 미일동맹 하에서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일 큰 공헌을 하는 미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재차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함.

다. 미·러 관계

2017. 6. 19.

■러 “시리아 작전 美주도 국제동맹군 전투기 공격 표적될 것”(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군에 의한 시리아 전폭기 격추 사건 이후 시리아에서 작전하는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 전투기들을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함.
-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미군 전투기의 시리아 전폭기 격추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며 시리아에서 미군과의 우발적 충돌 방지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함.
- 러시아 국방부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시리아 중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의 항공기와 무인기는 공중 표적으로서 러시아 방공시스템의 추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함.

2017. 6. 21.

■러 외무차관, 美 정무차관과의 회담 일방 취소…제재 확대 반발(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를 이유로 이번 주로 예정된 토머스 새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힘.
- 미 재무부는 앞서 20일 38명의 러시아인과 단체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함.
- 라브코프는 이날 자국 외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맞춰 취해진 이 같은 행보(대러 제재 확대)는 물러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채택된 양국 관계 훼손 노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러시아 국방장관 전용기에 나토군 전투기 위협 비행”(연합뉴스)

- 러시아 서부 국경 지역에서 서방과 러시아 공군기가 위협하게 대치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발트해 공해 상공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탄 전용기에 접근을 시도함.
- 당시 쇼이구 장관은 국방 관련 군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전용기를 이용해 발트해에 인접한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로 이동하던 중이었음.
- 쇼이구가 탄 전용기가 발트해 상공을 지날 무렵 F-16 전투기가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왔고 이에 전용기를 엄호 중이던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두 항공기 사이로 끼어들음.

2017. 6. 23.

■ 러시아 외무 “美 추가 제재, 양국 관계 심각 위협”(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 확대와 관련해 “이러한 행동은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는 양국 관계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난함.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 직후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헛된 시도”라며 이같이 밝힘.
-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 38명의 러시아인과 단체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추가함.

라. 중·일 관계

2017. 6. 20.

■ 日·베트남 ‘남중국해 연대’ 강화…‘中 견제’ 해경 합동훈련(연합뉴스)

- 일본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경제적으로 한층 밀착하고 있음.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맞선 연대 전선에서 필리핀이 이탈한 상황에서 일본과 베트남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 20일 베트남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과 베트남 해양경비대는 지난주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했음.

2017. 6. 22.

■ 中, 다오위다오 日영토 표기지침에 “역사·현실 직시하라”(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에서 양국 간 분쟁대상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함.
-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는 오래전부터 중국 영토이며 온전하게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경 대변인은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다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도발을 중단함과 동시에 정확한 역사관을 갖춘 세대에 심어줘 중일관계에 새로운 장애를 만드는 것을 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2017. 6. 19.

- ‘美에 무력시위’?...중국·러시아 9월 동해서 해상연합훈련(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7월 발트해에 이어 9월 중순 ‘해상연합-2017’ 훈련을 오는 9월 동해와 오후츠크해에서 실시함.
 - 중러 양국은 연례 훈련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발 대응을 목적으로 미국의 핵항모 전단이 잇따라 전개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됨.

바. 일·러 관계

2017. 6. 22.

- “러일 영유권 분쟁지역서 한국·러 업체, 항만공사”...日 경계(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한국 기업이 러시아 업체와 손잡고 항만공사를 시작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함.
 - NHK는 북방영토 중 시코탄(色丹)에서 러시아 기업이 한국의 건설회사와 함께 이달 초 새로운 부두 설치공사를 시작했다며 내달 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3천t급 대형 어선이 접안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함.
 - 방송은 한국 기업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기업에 대해선 사할린에 본사를 두고 북방영토에서 수산과 건설업을 하는 “기드로스트로이”라고 밝힘.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6.16	유엔 특별보고관 “北, 워비어 상태 분명히 설명해야”(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北 억류 임현수 목사 건강 우려”(연합뉴스)
	6.19.	북한서 혼수상태 귀환 워비어 끝내 사망(자유아시아방송) 미 의원들, 트럼프에 연명서한 “북한인권 증진해야”(자유아시아방송) 유엔난민기구 “난민자격 탈북민 1천422명”(연합뉴스)
	6.22.	마이클 커피 “워비어, 죽음으로 북한내 다른 수감자들 고통 고발”(연합뉴스) 중국내 북한식당 잇달아 문 닫아(자유아시아방송) 법무부 부장관 “북한에서 노동교화는 고문 의미”(자유아시아방송)
	6.23.	북한 해외노동자 수용국들, 인권 보호 의무(미국의소리) 각국 북한여행지침 ‘최고지도자 모욕 금지-외국인 억류 가능성 상존’(미국의소리)
	6.17.	북 “마지막 한 명까지 불법 통화 단속”(자유아시아방송)
	6.18.	北,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 여종업원들 송환 요구(연합뉴스)
	6.19.	北 “최근 3년간 북한 송환된 어린이 48명”...유엔에 답변(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6.20.	北, 장애인 복지 강화-사회적 관심 촉구 ‘눈길’(연합뉴스) 북 화교, 상납 안 하면 중국방문도 못해(자유아시아방송) 북, ‘농촌 동원 단속 강화’(자유아시아방송)
	6.21.	中과견 北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3분의2는 상납(연합뉴스) 농업생산 올라가미가 된 포전제와 주체농법(자유아시아방송)
	6.23.	북한 부처간 손발 안맞아 워비어 건강악화 뒤늦게 파악(연합뉴스)
	6.20.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은 잘 있나...“일부 건강 우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6.20.	유엔난민기구 “난민자격 탈북민 1천422명”(연합뉴스)
	6.20.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체 정부 직접 관리 확정(연합뉴스)
대북지원	6.23.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100t 지원...올 들어 처음(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6. 16.

■ 유엔 특별보고관 “北, 워비아 상태 분명히 설명해야”(연합뉴스)

-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혼수상태에 빠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아(22)와 관련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또 워비아의 상태가 북한 내 구금자 인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에 구금자 인권을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 국제앰네스티 “北 억류 임현수 목사 건강 우려”(연합뉴스)

-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아 씨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가 2년 넘게 북한에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건강 상태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국제앰네스티 캐나다지부는 “북한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 목사가 영양실조와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함.
- 특히 구금 기간 중 노동교화소와 병원을 오간 임 목사는 체중 감소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절염이 발병한 데다 부실한 식사와 의약품 부족 등에 따른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함.

2017. 6. 19.

■ 북한서 혼수상태 귀환 워비아 끝내 사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고향인 오하이오주에 돌아갔던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워비아 씨가 현지시각 19일 오후 2시 20분 끝내 숨을 거둠.
- 워비아 씨의 부모인 프레드 워비아 씨와 신디 워비아 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천덕꾸러기 같은 정권(Pariah Regime)’인 북한의 비인간적인 처우로 아들이 희생됐다고 비난함.

■ 미 의원들, 트럼프에 연명서한 “북한인권 증진해야”(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인권법 연장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된 데 이어 현재 공식인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는 연명서한까지 제출됨.

-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 등은 최근(6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증진을 미국의 대북정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2017. 6. 22.

■ 마이클 커비 “웬비어, 죽음으로 북한내 다른 수감자들 고통 고발”(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78)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죽음은 북한에 갇혀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함.
-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전 위원장은 21일 시드니연구소 연설을 통해 웬비어가 겪은 고통은 매일 무시무시한 폭력적 행위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2일 보도함.
-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에서 정치 선전물을 가져가려 한 웬비어의 행동은 자신에게는 조심성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으로만 생각됐을 테지만 북한당국으로서 는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내 북한식당 잇달아 문 닫아(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소식통은 20일 “칭다오 청양구 한인 타운에 있던 북한 식당 3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면서 “칭다오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북한식당 들도 찾는 손님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칭다오시 류팅 국제공항인근에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한인 타운이 있다”면서 “최근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 긴장국면에도 불구하고 칭다오의 한국 식당들은 여전히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또 “칭다오 한인 타운에는 현재 수십 개의 한국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북한식당은 고작 3개뿐이었다”며 “하지만 요즘 들어 손님이 찾지를 않아 그나마 폐쇄된 것 같다”고 지적함.

■ 미 법무부 부장관 “북한에서 노동교화는 고문 의미”(자유아시아방송)

-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웬비어씨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고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됨.
- 22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지난 20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 열린 범죄예방과 공공안전 관련 행사에서 기조연설에서 “오토는 실제 귀환하지 못한 셈입니다. 북한에서 노동교화(hard labor)는 고문(torture)을 의미합니다.”라고 발언함.

- 워비어씨 사망 뒤 그 가족과 언론이 고문과 학대를 사인으로 추정된 적은 있지만 미 정부 관리, 특히 사법당국 고위 관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언급한 건 이례적임.

2017. 6. 23.

■ 북한 해외노동자 수용국들, 인권 보호 의무(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
-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한 모든 ILO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임.
- 특히 이들 나라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조건과 임금,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ILO의 8대 핵심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함.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각국 북한여행지침 '최고지도자 모욕 금지-외국인 억류 가능성 상존'(미국의소리)

- 영국 외교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북한 여행 지침에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북한 여행 시 매우 조심할 것을 강조함. 이 지침은 특히 북한 최고지도부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절대 피할 것을 당부함.
- 러시아 외교부도 지난 3월 발표한 지침에서 북한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라고 권고함. 또 북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지폐를 손상하지 말라고 당부함.
- 이 지침은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 있는 선전화나 선전 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지난해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최근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씨의 숙소에서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음.
- 호주 외교부의 관련 지침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모욕은 범죄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어겨 외국인이 억류된 경우가 있었으니 특별히 주의하라고 밝힘. 또 관광 중에 다리나 교량, 항구, 공항 등을 찍으며 간첩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빈궁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을 찍지 말도록 권고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6. 17.

■ 북 “마지막 한 명까지 불법 통화 단속”(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부를 취재하는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북부지방에 사는 취재협력자의 말을 인용해 "보위성이 주도하는 이번 불법 통화 단속은 마지막 한 명까지 뿌리 뽑는다고 한다"며 중국과 전화한 사람은 물론 주변 인물까지 붙잡아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한국과 연계된) 불법 통화를 뿌리 뽑으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가보위성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감.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을 적발했던 과거의 단속에서 나아가 앞으로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뿌리 뽑을 정도로 단속이 매우 강화됨.

2017. 6. 18.

■ 北, 유엔인권이사회서 탈북 여종업원들 송환 요구(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집단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국제무대에서 요구함.
- 북한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연설에서 “지난해 4월 12명의 우리 여성공민들을 집단 유인·납치하고도 아직 무작정 그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는 21세기의 전형적인 납치범죄, 특대형 인권유린 만행”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이어 “우리 대표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인권이사회가 현대판 인권유린 행위인 우리 여성공민들에 대한 유인납치 문제에 계속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즉시 송환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7. 6. 19.

■ 北 “최근 3년간 북한 송환된 어린이 48명”...유엔에 답변(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기구에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아동이 48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됨.
- 19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 있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힘.
- 아동권리위원회는 앞서 북한 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어린이의 수 등에 대한 최신 통계수치 제공을 요청함.
- 북한은 탈북 어린이 문제에 대해 “일부 어린이가 동반자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면서 “이는 일부 적대 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함.

2017. 6. 20.

■ 北, 장애인 복지 강화·사회적 관심 촉구 ‘눈길’(연합뉴스)

- 북한이 장애인들에 대해 최근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18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장애인보호연맹 관계자와 장애인들,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모임이 열렸다고 보도함.
- 특히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17일 “장애자 예술소조 공연 ‘아버지라 부릅니다’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힘.

■ 北 화교, 상납 안 하면 중국방문도 못해(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을 방문하는 화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상납 요구가 황당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힘. 화교사회에서는 이러다 우리도 (조)총련 귀국자들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젠 세관쟁이(세관원)들도 화교들을 통해 특별히 이득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화교들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기 어려워 세관원의 부탁 같은 건 ‘먼 산에서 개 짖는 소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말함.
- “큰 장사를 하는 화교나 사사여행자들에게 중앙에서 요구하는 물자가 너무도 많아 중국에 드나드는데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중앙의 요구를 다 들어주자면 장사밑천까지 털어놔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임.

■ 북, '농촌 동원' 단속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매년 농번기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농촌 동원에 북한 주민이 강제로 투입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더 강력히 농촌 동원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매일 아침 주민에게 농촌 동원을 독촉하는가 하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무조건 동원 현장에 보냄.
- 도시나 농촌에서 단속원들이 신분증과 여행증을 검사하고, 통행증의 기한이 지난 사람, 통행증이 없는 사람 등은 무조건 농촌에 보낸다고 함.
- 북한 당국이 올해 농촌 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로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의 최소화, 둘째, 북한 주민의 통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됨. 농촌 동원이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북한의 뒤떨어진 농업체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2017. 6. 21.

■ 中파견 北노동자 임금 월 200~300달러...3분의2는 상납(연합뉴스)

-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 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특별취재팀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실태, 중국을 가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중국 체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조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염 팀장은 또 중국이 2011년 11월부터 자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중국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전함.

■ 농업생산 올가미가 된 포전제와 주체농법(자유아시아방송)

- 노동신문은 6월 13일자 3면에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라는 자각 안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자 - 과학적인 비배관리는 알곡고지 점령의 근본담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음. 이 기사는 농작물 가꾸기 모든 공정을 '주체농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의 제재와 봉쇄가 절정에 달한 엄혹한 환경에서 협동농장에 할당된 포전을 나의 포전처럼 가꾸고 1950년대 애국농민들처럼 농사열풍을 세차게 올려야 한다며 농민들의 생산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초점을 맞춤.

- 이는 북한 농업근로자들에게 협동농장 ‘포전’과 ‘주체농법’을 매개로 하여 북한체제의 ‘집단주의’와 ‘세습독재’를 유지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깔고 작성되었으며, 농업근로자의 심중에 반미의식을 깊이 심어 놓으려는 사상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2017. 6. 23.

■ 북한 부처간 손발 안맞아 워비어 건강악화 뒤늦게 파악(연합뉴스)

- 의식불명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22) 사건과 관련, 북한에서 관련 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대외창구인 북한 외무성은 워비어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종전에도 억류 미국인을 외교카드로 사용하면서 고문도 하지 않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워비어를 억류했던 국가보위부가 제때 알리지 않아 외무성은 상황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아사히(朝日)신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지난 5월 억류중인 미국인 4명의 석방을 요구하자 최설희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나서 알아본 끝에 워비어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6. 20.

■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은 잘 있다…“일부 건강 우려”(연합뉴스)

-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음. 또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됨.
- 북한은 2015년 3월 이들을 기자회견장에 세우고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찌 보려고 날뿜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함.
- 지난해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임. 정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어디에 억류돼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6. 20.

■ 유엔난민기구 “난민자격 탈북민 1천422명”(연합뉴스)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탈북민 수가 1천4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이는 전년도(1천103명)보다 319명 증가한 것이며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은 전년도(230명)의 배가 넘는 533명으로 파악됨.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민을 모두 합하면 1천955명으로, 전년(1천333명)보다 28% 증가한 것이라고 유엔난민기구는 전함.
- 보고서에는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탈북민과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한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돼 탈북 난민은 실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체 정부 직접 관리 확정(연합뉴스)

-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아닌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직접 관리함. 통일부 장관이 유전자 검체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탁하는 방식임.
-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했던 이산가족들의 혈액·타액·모발 등의 유전자 검체들이 이달 말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됨.

5. 대북지원

2017. 6. 23.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100t 지원...을 들어 처음(미국의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두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주콩 100t과 말린 국거리 23t을 지원함.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을 들어 처음 지원한 물자가 곧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하.
 - 퍼스트 스텝스는 이 메주콩으로 평안남도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를 생산함.